

고규홍의 '나무 생각'



60년에 한 번 꽃 피우는 신비의 식물

세상의 모든 나무는 꽃을 피운다. 꽃은 자손 번식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절차로, 모든 식물의 생존 본능에 따른 필수적 현상이다. 그러나 생김새나 피어나는 시기가 제각각 다른 탓에 꽃을 볼 수 없는 나무들이 있다. 이를테면 느티나무의 꽃은 4월쯤에 피어나지만, 관찰하는 건 쉽지 않다. 큰 몸피와 달리 느티나무의 꽃은 지름 3밀리미터 정도로 작게 피어나는데다 황록색의 꽃이 잎겨드랑이 부분에서 피어나서 잎사귀와 구별하기 쉽지 않다. 꽃이 피어도 일주일 지나기 십상이다. 꽃이 피어나기는 하지만, 존재감은 두드러지지 않을 수밖에 없다.

꽃을 보기 어려운 나무로는 대나무도 있다. 대나무의 개화에는 현대 과학으로도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가 들어 있다. 우선 꽃이 하나의 나무에서만 피어나지 않고 더불어 자라던 대숲의 모든 대나무에서 일제히 피어나는 것부터 어리송하다. 또 꽃이 해마다 피어나지 않고, 60년이라는 긴 주기를 갖고 피어난다는 건 더 놀라운 일이다.

대나무 한 그루의 수명이 길어져 고작 20년이고 보면, 꽃 한 번 피우지 못하고 그냥 죽는 나무들도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1백 년을 채 못 사는 사람으로서 대나무 꽃을 보지 못하는 건 특별한 일일 수 없다. 대나무가 자라는 환경 조건이 현저하게 다른 곳이어도 개화 주기만큼은 똑같다. 현대 과학은 대나무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 긴 시간을 계산하는지 풀어내려고 애썼지

만,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했다.

대나무 개화의 신비는 더 이어진다. 일제히 꽃을 피운 대밭의 대나무들은 꽃이 지면서 동시에 모두 말라죽는다. 한 송이의 꽃을 피우기 위해 60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쳐 쌓아온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은 뒤에 장렬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다. 다시 예전처럼 무성한 대숲을 이루려면 적어도 10년 이상 걸린다. 그래서 예전부터 대나무의 개화는 불길한 조짐으로 여겼다. 물론 꽃이나 나무에 대한 각 지방의 문화와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일부 지방에서는 대나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 풍년이 들 징조라고 반기는 곳이 있기는 하다.

흔히 식물을 크게 둘로 나누어 목본식물과 초본식물 즉 나무와 풀로 나눈다. 한데, 대나무는 이름에 '나무'가 붙어 있어서 나무로 여기기 쉽다. 그러나 옛 사람들은 대나무를 비목비목(非木非草), 즉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니라고 했다.

대나무는 소나무·느티나무·은행나무처럼 사계절이 모두 지난 뒤에도 줄기가 그대로 남아서 수십 년을 살아가기 나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나이에가 새겨져야 할 줄기 안쪽이 텅 비어있는 점은 나무로 보기 어려운 점이다. 줄기가 텅 비어있는 특징을 '공통(空洞) 현상'이라 부르는데, 이는 나이에가 새겨지는 줄기 안쪽의 심재가 발달하는 나무와 결정적으로 구별되는 특징이다. 시인 함민복은 대나무 중심 줄기가 텅 비어 있

는 특징을 "공기의 지옥으로/ 빗어 내 아./ 공기, 그 만 저지르지 않는/ 허무가 나의 중심 뼈대"(‘대나무’)라고 노래하기도 했다.

대나무를 풀이라고 부르려 해도 문제는 남는다. 풀은 잎이 나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뒤에 줄기가 시들어 죽는다. 여러해살이풀이라 해도 줄기는 시들어 죽고, 뿌리만 남아서 겨울을 보낸다. 그런데 대나무는 몇 해를 두고 잎도 시들지 않고 줄기도 살아 있으니 풀이라 하기에도 맞지 않다. 이 같은 이유로 나무를 건축이나 가구의 재료로 쓸 때 목재라 부르지만 대나무는 '죽재(竹材)'라고 구분해 부른다.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건 그래서다.

그러나 식물학적으로 엄밀히 짚어 보면 대나무는 나무보다 풀 쪽에 가깝다. 개화 주기가 특별하기는 해도 분명히 꽃 피운 뒤에 열매를 맺고 죽는 건 여느 풀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사철 푸르른 나무여서 대나무는 소나무와 함께 군자의 기상과 선비의 절개 등을 상징하는 나무로 여겨졌다. 대나무를 가까이 한 우리 선조들은 거기에 덧붙여 마디가 뚜렷해서 절도의 미덕, 속이 텅 비었다 해서 욕심 없는 삶의 미덕을 상징하는 나무로 여기며 오랫동안 삼어 키웠다. 대나무야말로 앞으로도 오래 우리 곁에 잘 심어 키우며 돌보아야 할 우리의 나무, 아니 풀이다.

〈나무 칼럼니스트〉

의료칼럼

세 살 시력, 여든까지 갑니다



마양래 보라안과병원장

아이의 눈처럼 맑게 빛나는 보석을 또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그 보석을 매일 들여다 볼 수 있는 나는 소아 안과 전문 안과의사다.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은 어릴 적 버릇은 늙어서도 고치기 어렵다는 말이지만, 눈 건강에도 통용되는 말이다.

유아기는 육체적 성장과 더불어 지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정상적인 시각을 가진 아이는 보고 관찰하면서 얻어지는 시각 정보를 통해 건강하게 성장한다. 실제로 일상생활 정보 중 약 80%가 시각을 통해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눈은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다.

아이들의 시력이 완전히 완성되는 시기는 만 6세경 이어서 그 이전인 만 3-6세 때 눈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유아기에 시력 발달이 정상적이지 못하면 아이의 평생 교육과 사회생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방지하려면 약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아 사시의 특징과 치료에 대해 알아보자.

사시는 무언가를 볼 때 한쪽 눈은 정면을 응시하지만 다른 눈은 그 물체가 아닌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경우를

말하는데, 눈이 안쪽으로 치우치면 내사시, 바깥쪽으로 치우치면 외사시로 구분한다. 사시의 원인은 대부분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가족력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사시는 유전과 큰 관련이 없다. 사시의 원인을 뇌에서 안구 운동을 담당하는 신경의 문제로 짐작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어떤 부분의 이상으로 발생하는지 밝혀진 것은 없다.

소아에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사시는 '간헐성 외사시'이다. 어릴 때부터 사시가 나타나므로 부모의 세심한 관찰이 중요하다. 무언가를 가까이 볼 때는 눈이 같은 곳을 바라보지만, 먼 곳을 보거나 멍하게 볼 때 증상이 주로 나타난다. 1세경 발생하는 영아 내사시와 2~3세경에 주로 나타나는 조절 내사시 등도 있다.

사시는 외관상 보기가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어릴 때 시력 발달이 충분히 안 돼 최종 시력이 좋지 않을 수 있다. 특히 한쪽 눈이 돌아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약시(안경을 쓰고도 시력이 안 나오는 상태) 위험이 커진다. 시력은 만 10세까지 발달하는데, 사시인 경우 양쪽 눈이 맘막에 맺히는 상이 달라지면서 입체감 저하 등 두 눈을 같이 사용해야 하는 양안 시기능에 저하가 생길 수도 있다.

사시를 의심할 수 있는 주요 증상은 두 눈의 초점이 다르거나 멍하게 볼 때 눈이 밖으로 돌아가고, 유난히 햇빛이나 전등 불빛에 눈부심이 심한 경우 등이다.

사시의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수술이다. 수술은 눈을 움직이는 근육의 힘을 강화하거나 약화시켜서 눈동

자의 위치를 정상화한다. 일반적으로 수술 시간은 약 1시간 정도 걸리며 전신마취가 필요해서 어린이에겐 부담이 될 수 있고, 재발 가능성이 약 30%나 된다. 다행히 모든 사시 환자가 무조건 수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조절성 내사시는 안경으로 치료하며, 간헐성 외사시도 눈이 정상 상태로 잘 모을 수 있고, 눈동자가 돌아가는 각도가 작으면 수술하지 않고 지켜보기도 한다.

스마트폰·컴퓨터·게임·TV 등에 일찍 과잉 노출돼 있는 우리 아이들의 눈 건강에 빨간 불이 켜졌다. 2019년 10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공개한 '어린이와 청소년의 휴대폰 보유 및 이용 형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초등학교 저학년은 하루 평균 45분, 고학년은 105분간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단지 하루 평균 사용 시간이니, 수면 시간을 제외하고는 아이들의 눈은 쉬 틈이 없는 셈이다.

아이들의 신체 이상은 부모의 세심한 관찰로 발견하게 된다. 어린이는 시력이 나빠거나 눈에 어떤 이상이 있어도 표현하지 않고 적응하며 그냥 지내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눈의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방치하다가 나중에 발견하면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부모가 관심을 갖고 조기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에게 특별한 이상이 없더라도 시력 발달 시기인 3세 이후부터는 연 2회 정도 안과 전문의를 찾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아이의 소중한 눈 건강을 확인하고 지켜줄 수 있다.

기고

유언에도 지켜야 할 법칙이 있다



정구태 조선대 법사회대학 공공인재법무학과 교수

A씨는 몇 년 전 배우자를 먼저 여의고 나서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 재산을 복지재단에 기부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A씨는 백지 위에 직접 "나 A는 남은 모든 재산을 ○○복지재단에 기부합니다"라고 쓰고 이름과 연월일, 집 주소를 적은 뒤 사인하여 보관해 두었다. 그런데 A씨가 세상을 떠난 후 유산은 복지재단에 기부되지 못하고 두 자녀에게 똑같이 나누어 상속되었다. 왜 그랬을까?

유언이란 유언자가 자신이 사망함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법률이 정한 방식에 따라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이다. 민법은 유언 규정을 통해 유언자가 사후에도 자기 소유의 재산을 생전의 의사에 따라 처분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 이는 민법 기본 원리 중 하나인 사적 자치의 원칙에 기반을 둔다. 사적 자치의 원칙은 개인이 자기의 법률 관계를 그의 자유의사에 따라 형성하는 것을 인정하는 원칙이다. 여기에는 법률 행위 자유의 원칙(계약 자유의 원칙), 소유권 자유의 원칙 등이 포함된다.

유언이 성립하려면, 먼저 개인이 임의로 재산을 처

분할 수 있도록 사유 재산 제도가 인정되어야 한다. 재산을 국가나 사회만 소유할 수 있다면, 유언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유권 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이유이다. 또한 유언이 자유롭게 행해지려면 유언자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 일반적 행동의 자유는 재산권 및 행복 추구권에서 파생되는데, 이는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한다. 이는 법률 행위 자유의 원칙과 이어진다. 이러한 기본적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유언자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후에도 재산을 처분하는 유언의 자유 자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법은 개인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사적 자치의 원칙과 함께,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려는 사회적 형평의 원칙도 고려한다. 남겨진 유언이 없거나 유언의 효력이 없는 경우 적용되는 상속 제도는 사회적 형평의 원칙을 좀 더 적용하여, 남은 가족들에게 유언이 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앞에서 예로 든 사건에서 A씨의 유언은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아 상속법에 따라 유산이 자녀들에게 똑같이 나누어졌다. A씨가 작성한 유언장이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유언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유언은 민법이 정한 요건이나 방식을 정확히 지켜야만 효력이 인정된다. 그 요건이나 방식이 조금만 어긋나도 유언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효가 된다. 이를 '유언의 요식성'이라고 한다. 왜 그럴까?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야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유언이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유언이 있더라도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법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유언의 방식을 자필 증서, 녹음, 공정 증서, 비밀 증서, 구수 증서 등 다섯 가지로 엄격하게 규정한다.

이 중 유언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식은 자필 증서 유언이다. 앞서 A씨가 남긴 유언도 이에 해당한다. 자필 증서 유언은 문자를 알고 쓸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유언장을 공적으로 보관하는 제도가 특별히 없어 유언장을 분실하거나 유언장이 은닉 또는 위조될 우려도 크다. 또 유언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때로는 서로 상반되어 진실성을 둘러싼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많다. 이 때문에 자필 증서 유언은 다른 유언 방식에 비해 그 요식성이 더욱 더 엄격하다.

자필 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전체 문장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직접 쓰고 날인해야만 효력이 있다. 유언자가 서명만 하고 날인을 하지 않았다면 설령 유언자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데 문제가 없더라도 무효이다. A씨의 유언장이 무효가 된 이유도 이 요건 때문이다. 날인은 꼭 도장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손도장, 즉 무인(捺印)도 허용되며 반드시 유언자 본인의 할 필요도 없다. 날인에는 자필 증서가 단지 유언의 초안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확정된 유언임을 담보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 즉 날인을 통해 이 유언이 최종 유언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이 유언장에 날인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社說

코로나 1년, 소중한 일상 빨리 되찾으려면

코로나19 확진자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 한 지 1년이 지났다. 몇 달만 버티면 끝나겠지 했던 신종 감염병의 장기화는 우리 삶의 풍경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다. 마스크는 생활필수품이 되었고, 방역을 위해 이웃은 물론 가족 간에도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했다. 온라인 수업과 재택근무 등 사회 각 분야에 비대면 문화가 보편화되고 있다. 친목 모임이나 여행 등 평범했던 일상은 당분간 꿈도 꾸기 어려워졌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그제까지 모두 7만 351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광주·전남에서는 광주 1463명, 전남 678명 등 214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래도 전남 지역은 국내 10만 명당 확진자 발생률 141.8명에 훨씬 못 미치는 36.36명으로 전국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광주도 네 차례의 대유행 파고를 겪었지만 100.43명을 기록하고 있으니 비교적 선방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지역 경제계는 깊은 수렁에 빠졌다. 전남의 주력 수출품인 석유화학 제품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수출이 16.9%나

감소했고, 주요 상권의 매출도 25% 이상 줄어들었다. 특히 집합 금지로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자영업자들은 폐업이라는 막다른 길로 내몰리고 있다. 이 같은 경제 침체로 1년 새 20-30대 취업자가 무려 2만 명이나 줄어들면서 지역 청년들은 고용 절벽에 내몰리고 있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방역의 최일선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여 온 의료인들의 고통도 이제는 한계점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다. 백신과 치료제가 잇따라 나오면서 희망의 빛이 보이지만 아직 갈 길은 멀기만 하다.

결국 코로나 이전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으려면 모임과 이동 자체 등 방역 수칙의 철저한 준수로 하루빨리 감염병 확산을 종식시키는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병상과 의료 인력 등 공공 의료 체계를 보완하고, 다음 달부터 시작된 백신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영업 제한으로 타격이 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손실 보상 방안 마련도 절실하다.

영광군 탈원전 대안 마련 주민과 함께해야

영광군은 그제 군청 소회의실에서 '한빛원전 1·2호기 폐로(廢爐) 대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2차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오는 2025년과 2026년에 폐로되는 한빛원전 1, 2호기를 대신하는 지역 신산업 육성 방안을 담은 '뉴 플러스 영광 비전' 전략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영광을 향후 '수소발전 중심의 미래 에너지 도시'로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 원자력발전 대신 LNG(액화천연가스) 복합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데 총력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 그 골자다. 영광군은 LNG 화력발전소가 건설될 경우 세수(2030년 기준)가 941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LNG 화력발전안이 탈(脫)원전 기조인 정부의 '2050 대

한국판 탄소 중립 비전'과 맞지 않는 근시안적 대책이라고 지적한다. LNG 화력발전은 석탄 전기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소보다 유해물질 배출이 적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과연 유해물질 문제는 없는 것인지, 기대만큼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지 궁금해 할 수밖에 없다. 현재 전국적으로 24개소의 LNG 화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지만 건설 완공 시점인 2030년에는 구식 발전 기술로 전락할 수도 있다.

정부의 결사해지가 필요하다. 영광 등 원전 소재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 영광군 역시 원전을 대체할 '신재생 첨단 도시'로 발돋움시키기 위해서는 '장밋빛' 청사진 제시에 그쳐서는 안 된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주민들의 의견 수렴 등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無等鼓

유럽의 오래된 도시에는 중세나 근대의 건축양식이 많이 남아 있다. 멋진 광장과 공원도 여기저기 눈에 띈다. 이는 유럽 사람들이 가장 중시하는 것이 '공공'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지역 공동체가 공공 즉 모두의 것을 유지·보존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얘기다.

그들은 도시의 정체성이야말로 그 역사가 표현된 공간을 통해 드러난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골목길과 오래된 상권 등은 건드리지 않는다. 선진국 도시의 경관은 공공 자산이며 따라서 건 축물 소유주라도 마음대로 변형을 가할 수 없다. 현대식 고층 건물은 신시가지에만 들어설 수 있다.

그에 비해 우리는 어떠한가. 우선 우리나라 도시에는 보존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을 거치면서 전통미를 가진 건축물이나 공간 등이 많이 자취를 감췄다. 게다가 1960-1980년대 급증하는 도시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내구성은 약하고 미적인 요소 역시 갖추지 못한 '저급 저층 주택'들만 뿔뿔이 들어섰다.

과거 소득이 낮았던 시절에는 그래도 골목길에 정감이 넘쳤고 이웃사촌과 어울려 '사는 재미'를 주는 공간들이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 민간 재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도시는 똑같은 형태의 고층 아파트들로 뒤덮이고 말았다. 아파트가 부를 축적하는 투기 수단이 되어 버린 뒤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 재개발'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공금을 통해 아파트 가격 상승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그 방식을 보면 격정이 앞선다. 토지를 강제 수용 기간을 단축하고 용적률을 대폭 높여 혜택을 주되 그 일부를 공공임대로 제공하겠다는 것이 그 골자다. 과거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방식이다.

사실 정부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미래 우리나라의 도시상을 정립하는 것 아닐까. 공공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 도시 내에 공원이나 광장 등을 조성하고 고층 아파트만이 아닌 다양한 주택 양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아쉽다. '공공 재개발'은 구도심 재생과 경관 그리고 도시 미래를 함께 담아 추진해야 한다. /유현석 정치부 부장 chadol@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